

10

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의 융합

자치경찰 소식

〈10월호 특집〉 | 새로운 치안 패러다임,
‘자치경찰제 출범 100일’을 향한 시선

- ①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 그 성과와 과제
- ② 100일 동안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경찰청의 활동은?
- ③ ‘현장과 함께, 주민과 함께’
다양한 자치경찰 시책의 성공적 시행
- ④ 자치경찰제 시행 후 100일간의 목소리
- ⑤ 자치경찰제, 그 무한한 가능성에 대하여

위원회 시책 | 자치경찰 현장에서는 지금

위원회 FOCUS | 활기와 역동의 도시를 수호하는, 『부산자치경찰위원회』 편



자치경찰 시행 100일, 그 성과와 과제

- 10. 7. 자치경찰제 100일 기념 컨퍼런스 스케치 -

7. 1. 전면시행 이후 숨 가쁘게 달려온 자치경찰제가 어느덧 '100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지난 10. 7. 대구삼성창조캠퍼스 중앙컨벤션센터에서는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구자치경찰위원회 공동 주최로 '자치경찰 100일 성과 및 향후 발전과제 컨퍼런스'를 열고,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이후 100일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날 행사는 1·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1부에서는 김창룡 경찰청장 등을 비롯한 내·외빈의 축하 등을 시작으로 김현태 경남자치경찰위원장의 '자치경찰제의 성과와 과제' 발표가 있었고, 2부에서는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제1회 정기회의와 함께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 관계자, 학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제 관련 현안과 쟁점들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자치경찰제라는 새로운 치안 패러다임이 경찰·시민 모두에게 큰 호응, 협업의 정신으로 안전과 분권의 가치를 조화시켜 한국형 자치경찰제라는 멋진 그림을 그려나가야 할 것”

- 김창룡 경찰청장 -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 2.0시대의 핵심과제로 제도적 과도기의 진통을 슬기롭게 극복해 주민 곁에 안착시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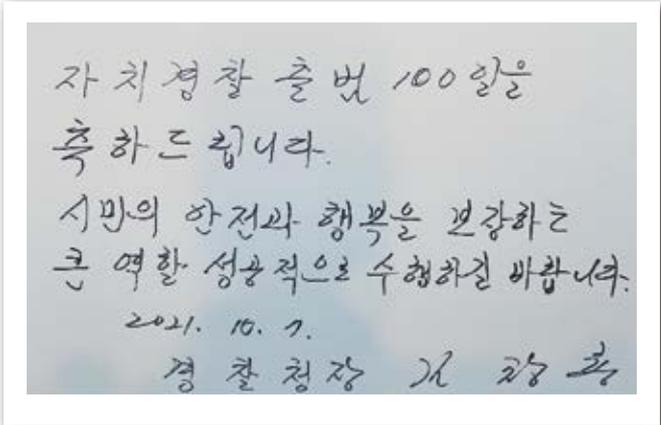
-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풀뿌리 치안 시대의 시작을 기대, 국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등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더 세심하게 지원할 예정”

-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축사 대독) -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이고, 이를 위해 지역의 민생치안 체계를 제대로 만들어 갈 것,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요청”

- 권영진 대구시장 -



100일 동안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경찰청의 활동은?

◆ 경찰청-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 「정책협의회」 구성 추진

경찰청은 치안정책의 새로운 플랫폼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구체적 성과 창출을 이루고 미래 비전 제시가 가능하도록 정책협의회 구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찰청과 18개 자치경찰위원장 참석, 협의회 구성(案)

<분과위원회>

- ◆ 경찰청 국·관
- ◆ 위원회 사무국장

생활안전
분과

여성청소년
분과

교통
분과

<목표>

- ◆ 중앙 - 지방 간 자치경찰제 가치 공유 및 성과 창출, 주민 지지·신뢰 구축을 위한 유기적 협력

<이제 및 안건>

- ◆ 전국적·통일적 수행이 필요한 치안현안 협의·조정
- ◆ 국가 - 자치경찰사무 협력 등 치안사무에 특화된 안건



소통 및 협력을 통한 제도의 조기 안착과 성과 창출을 충실히 견인

◆ 경찰관 및 일반공무원 대상 「자치경찰제 이해」 교육 실시

새롭게 시행된 자치경찰제의 내·외부 공감대 확보 및 이해도 제고를 추진하기 위해 '자치경찰제 이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대학】



【전남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 자치경찰 「관계기관 합동점검 회의체」 지속 운영



자치경찰제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경찰청·자치분권위원회·행안부 간 회의체 운영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에도 자치경찰 재정 지원 방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 진행

◆ 자치경찰제 관련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 개발

개요

- ◆ 그간 행안부에서 매년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실시해 온 합동평가 관련,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정책 개발·공유 등을 위하여 평가지표 개발

평가방법

- ◆ 각 지자체별로 '자치경찰 사무 관련 주요시책(1건)'을 제출받아, △지자체 노력도 △연계기관 등 협업 △확산 가능성 등 3가지 기준으로 합동평가단 평가 및 우수 지자체 선정

주요시책 예시

- ◆ 범죄 취약 요소 분석 후 시설 개선(CPTED) 등 지역 내 범죄예방 환경 구축
- ◆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대책 수립 등 지역 교통안전 문화 조성
- ◆ 경찰-지자체 협업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 수립
-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 방안

◆ 「인천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관련, 적극 대응



- 인천시의회에서는「인천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제정을 추진하면서 '지하철경찰대는 전동차 순찰시 임산부 외의 승객에게 임산부전용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안에 포함
- 이에 직협을 중심으로 한 현장의 반발과 함께 경찰청에서 적극 대응하였고, 인천시의회에서 조례안을 보류하기로 의결(9.10)
- 이후 임산부 전용석 지정·운영 관련 업무는 경찰의 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법제처 회신(10.8)

◆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박완주 국회의원실 토론회 (9.28)



《자치경찰제, 나아가야 할 방향은?》

- (주최) 박완주 의원실,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한국경찰연구학회
- (발제) △자치경찰 시행에 따른 향후 전망과 과제
△자치경찰 출범의 의의와 과제(위원회를 중심으로)
- (토론) 자치경찰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 과제

인권연대 토론회 (10.6)



《민주주의 관점에서 자치경찰의 실상을 본다》

- (주최) 인권연대, 이은주 의원실
- (발제) △위원회 구성과 운영 실태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운영(국민주권적 관점에서)
- (토론) △자치경찰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과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치안서비스 강화 방안으로서의 자치경찰제 등

'현장과 함께, 주민과 함께', 다양한 자치경찰 시책의 성공적 시행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에 즈음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성공적으로 시행 중인 자치경찰 대표 시책들을 소개합니다.

◆ 「현장경찰 대응력 향상」 - 정신질환자·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설치

정신질환자·주취자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라는 현장의 문제 제기에 응답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경찰청, 시·도 등과 협력, 응급의료센터 확충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9개 시·도 30개소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8개 시·도 16개소 운영 中('21. 10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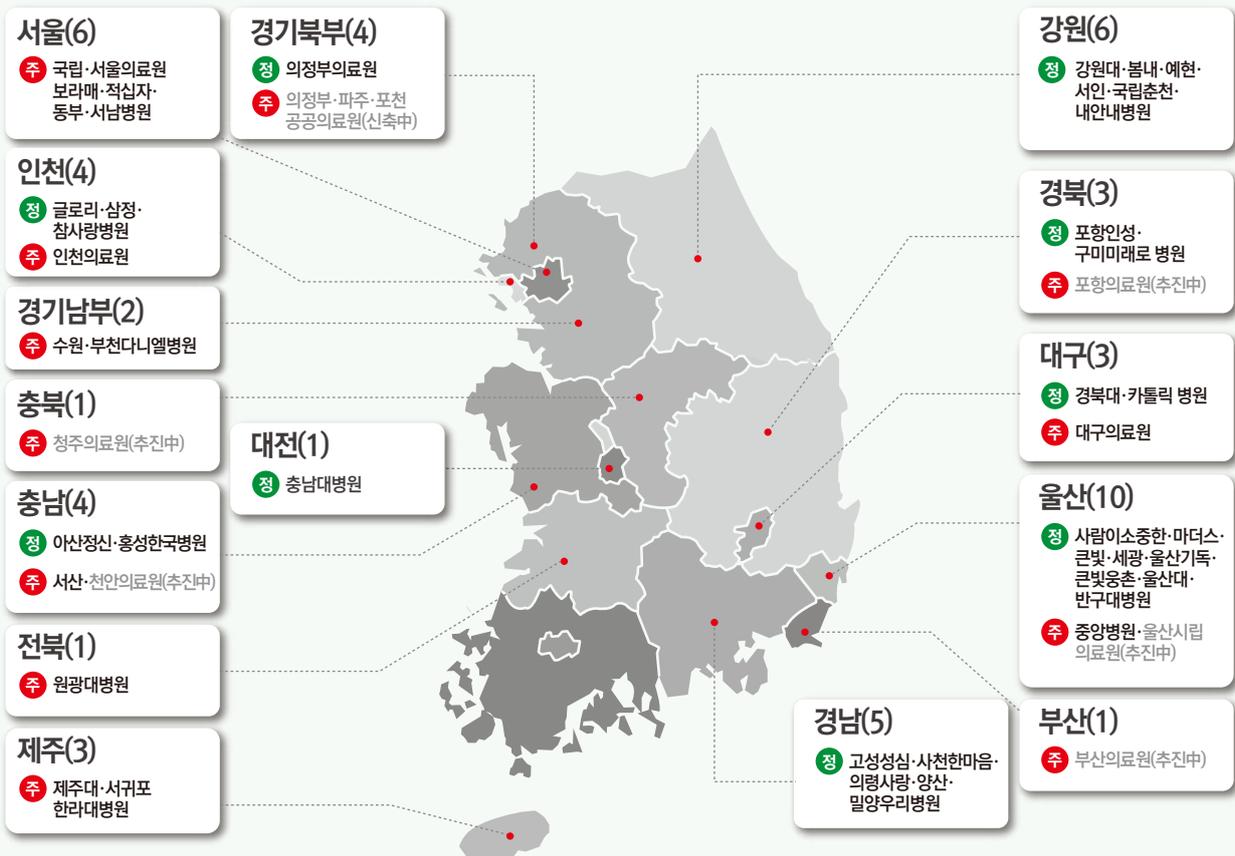
정신질환자·주취자 응급입원 업무 처리 개요

※ 구체적인 업무 운영방식은 시도별로 일부 상이



각 시·도별 정신질환자·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현황('21.10.19. 기준)

정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주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 「주민 요구 적극 수렴」 - 자치경찰 정책자문단 등 주민의 치안 참여 활성화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별로 정책수립·시행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자 지역 주민, 시민단체, 기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발족하여 자치경찰 관련 △시책 발굴 및 제언 △해결방안 모색 △자치경찰제 홍보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소통과 협의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자치경찰 정책자문단 운영 체계도



| 각 시·도별 주민 중심 정책 자문단 운영 현황('21.10.19. 기준)

시도	명칭	구성	시도	명칭	구성
서울	서울자치경찰 시민정책자문단	시민 300명	경기북부	경기북부자경위 정책자문단	시민 등 20명
부산	자치경찰 소통단	시민 등 527명	충북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뿔별 주민 30명
	자치경찰 전문가 자문단	시민 등 45명		충남	유스 폴 리더스 (YOUTH-POL LEADERS)
대구	시민중심 자치경찰 네트워크 협의체	시민 등 70명	충남		숨쉬는 우리동네 치안협력 네트워크
광주	청년 서포터즈 112	청년 112명	전남	전남자경위 정책자문단	시민 등 30명
대전	자치경찰 시티즌	시민 93명	경북	치안행정 길라잡이 정책연구단	시민 등 25명
세종	으뜸마루	16개 시민단체	제주	길라잡이 소통·자문단	시민 등 70명

자치경찰제 시행 후 100일간의 목소리

전면시행 이후 3개월여만에 자치경찰제는 조금씩 그 틀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치경찰제에 대해 모두가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직 일부에서는 제도의 완성도와 효과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자치경찰제 시행 후 100일간의 대내외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소개합니다.

현장 경찰

현장활동, 간담회 등 자체 의견 분석

전반적 분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 초기 일부 냉소적 분위기였으나, 자치경찰위원회 활동 본격화 이후 차츰 수용·공감 분위기로 전환 특히, 정신질환자·주취자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거나 지구대·파출소 시설·환경개선, 복지포인트·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등 후생복지 확대 추진 등에 호평
경위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경찰위원회와의 직접 접촉이 드물고 업무수행 또한 동일하여 실질적인 변화 체감이 어렵다는 반응
경정·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경찰위원회의 임용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 향후 인사운영 방향을 예의 주시
총경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경찰위원회 정기·임시회의 참석, 위원회의 지역관서장 보직 시 의견청취 및 경찰서장 평가 등을 보며 변화 체감, 일부 위원회 운영비 지원 필요성 등을 지적

일반 시민

지방행정연구원(7.2~16), 전북도(7.12~8.6), 경기도(8.20~23) 여론조사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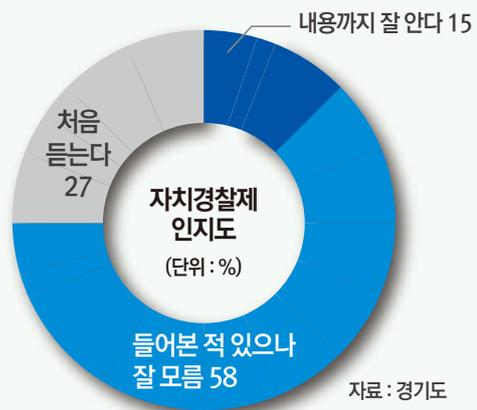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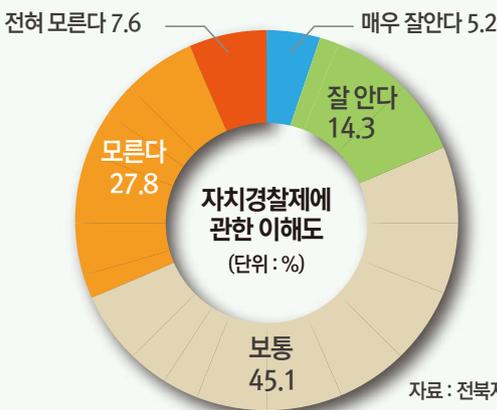
주민 반응

- 대다수가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라 치안서비스의 질, 초동대응역량, 주민 유대감, 치안 만족도 등의 향상을 기대
- 경찰관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가의 재정지원도 필요하다고 응답,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의 효과성을 긍정적으로 평가
- 제도 시행을 전면적으로 체감하지는 못하는 분위기이나, 전반적으로 치안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

주민 인지도

- 주민들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지도 및 이해도가 높은 편은 아니나, 전반적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전북] 도민 1,706명 대상 설문 결과, 자치경찰제를 ‘모른다’는 답변이 35.4%, ‘알고 있다’는 답변이 64.6%
※ 모른다: 전혀 모른다+모른다 / 알고 있다: 보통+잘 안다+매우 잘 안다
- [경기] 도민 4,000명 대상 설문 결과, 자치경찰제를 ‘처음 듣는다’는 답변이 27%, ‘들어본 적 있다’는 답변이 73%
※ 들어본 적 있다: 들어본 적 있으나 잘 모른다+내용까지 잘 안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주민 인지도 설문 결과



그 외

언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경찰제에 큰 관심을 표명하면서도 성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 주요 시책들이 기존과 차이가 없다는 비판과 함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시책 발굴 노력 등은 긍정 평가
시민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경찰위원회의 성별·경력별 구성 편중 지적 국가경찰 조직·인력 유지로 권력분산 미흡 등에 대해 비판적 입장 표명
학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 입법 및 제도 시행 자체에 큰 의의를 부여하는 의견이 상당 '자치경찰관 없는 자치경찰제', '무늬만 자치경찰' 등을 언급하며 이원화 모델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견해도 존재

자치경찰제, 그 무한한 가능성에 대하여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이후 100일간의 여정은 경찰 역사에 있어 전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경찰에게는 '무엇이 시·도와의 협업인가', '앞으로 경찰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모두에게 성공한 제도로 평가받기까지는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이제 100일을 조금 넘긴 제도에 대해 보완의 차원이 아니라 제도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 실정에 맞고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한국형 자치경찰제의 성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결핍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불완전함이나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미완성은 바로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는 유전처럼,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숱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정책과 제도는 처음부터 완벽하기보다 계속해서 다듬어가는 과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합니다. 30여년 전 수많은 우려와 회의를 안고 출발했던 지방자치제도가 이제는 국민 생활 속에 당연한 문화로 자리잡았듯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할 때 비로소 온전한 제도로 자리잡게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지역 주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지자체 그리고 경찰이 제도 정착을 위해 충분한 관심과 정성을 쏟는다면 자치경찰제는 후일 지방자치의 완성이자 대한민국 공공시스템을 한 단계 높여주는 역할을 하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갓 100일의 문을 연 '자치경찰제'에 힘찬 격려를 보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사항

경기남, 경찰 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도민 인권을 보다 존중하기 위한 노력에 매진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9. 16. 제10차 정기회의 시 경기남부경찰의 인권수준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찰관의 전반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에 기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그간 경기남부청(인권T/F팀·인권위원회) 단독으로 진행해온 인권진단에 있어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참여시키도록 보완함으로써 제도적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사무 관련 규칙 제·개정 및 관련 정책 수립 시 자치경찰위원회 주관 하에 인권영향평가도 실시하게 될 예정입니다.

경찰 활동에 있어 '인권'의 중요성과 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 수행 과정에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함으로써 경기남부경찰과 경기도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선제적 발걸음을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주요 논의사항

서울, '여성이 안전한 도시, 교통사고 없는 도시'를 위한 대책 마련에 박차

서울자치경찰위원회는 9. 30. 제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여성 안전 및 보호·지원 대책,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기관별 역할을 논의하였습니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요구하는 각계 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와 경찰이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및 순찰 강화, 스마트보안등 설치, 불법촬영 근절 홍보(市 제안) △희망센터 상담사 추가 배치, 범죄취약지 환경개선 관련 조례 개정(警 제안)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교통사고의 감소를 위해 위원회·한국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 및 관계기관 간 합동으로 '교통사고 감소 대책 T/F'를 운영, △교통사고 다발지점 시설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및 엄정 단속 등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및 서울청, 서울시 등 여러 기관의 노력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서울의 안전이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부산,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24시간 현장 대응팀' 신설 추진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9. 28. 제7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24시간 현장 대응팀' 신설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대응 등 보건 분야, 행려병자 보호 등 사회복지 분야, 특별사법경찰 수사 등 지자체가 처리하는 사무의 경우, 평일과 주간에 제외한 야간·주말에는 지자체 근무자가 상주하고 있지 않아 경찰(특히 24시간 근무하는 지구대·파출소)이 대신 처리하고 있어, 일선에서는 경찰 고유 분야가 아닌 업무까지 부당하게 전가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그간 경찰에서 처리한 '지자체 사무 관련 112신고 현황'을 바탕으로 부산 內 구·군별 6명 내외의 일반 공무원이 위 사무를 전담하는 현장 대응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PHOTO NEWS

충북

자치경찰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 위촉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주민맞춤형 치안정책 개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 시민단체·언론·학계·방법협력단체 등 전문가 10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9.28.)

충남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충남자치경찰위원회와 충남개발공사는 공사가 건축하는 공동주택 대상 범죄환경개선사업(CPTED) 적용 및 1인가구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10.6.)

전북

어린이 교통안전 민·관·경 캠페인 전개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전북청·도·교직원 및 녹색어머니회 등 협력단체와 함께 14개 시·군 사고 다발 초등학교 등 곳곳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수칙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전개하였다(10.8.)

'21.5.6. 부산자치경찰이 떠오르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변호사(2명), 대학교수(2명, 경찰출신 1명 포함), 전직 경찰(1명), 기업인(1명) 등 다양한 경력의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위원장 정용환 前부산청 보안과장/상임위원 박노면 동의대 교수, 부산시 연제구 국민연금공단 부산화관빌딩에서 운영 중입니다.

이하에서는 부산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추진 정책과 방향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 자치경찰 성공의 KEY

위원회가 출범한 직후 가장 집중한 것은 '시민과의 소통'이었습니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시민 인지도 개선과 차별화된 부산형 자치경찰제 구현을 위해 △자치경찰 소통단 △자치경찰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통단

일반 시민 및 공무원
527명으로 구성

△ 자치경찰 홍보메신저
△ 정책모니터링 등 수행

전문가 자문단

제도운영,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4개 분과 총 45명 구성

자치경찰 정책 자문 등 수행



부산의 안전을 향한 끊임없는 고민

<치안 리빙랩 사업>

시민과 지역대학의 교수·학생 등이 함께 일상 속 치안 문제를 발굴·정의하여 개선 방안과 정책 제언사항을 제시하면, 부산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청 등 관계기관에서 이를 구체화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치안 '리빙랩(LIVING LAB)'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솔루션 협의체 구성>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솔루션 협의체를 경찰서별로 구성하도록 의결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상담·법률·의료·경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 및 전문기관 연계 등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들의 활동은 아픔을 가진 피해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현장 경찰관의 복지가 곧 시민 안전

현장 경찰관과의 소통을 위해 직장협의회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경찰관의 복지가 곧 시민 안전에 직결된다'는 신념으로 현장 경찰관의 후생복지, 처우 개선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후생복지 추진사항) △종합건강검진비 △복지포인트 차액 지급 △독감예방 접종 등

부산 자치경찰은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고 지역 치안에 파급력이 높은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안전'이 부산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기고

정용환
부산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치안행정과 자치행정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경찰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지난 7.1.자로 전면시행되어 10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다소 급작스럽게 도입된 일원화 자치경찰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각 위원회와 현장경찰관들의 노력으로 이를 상당 부분 불식시켜 나가고 있는 점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5. 6.출범 이후 2개월 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전면시행에 돌입하였습니다. 그간 각종 규칙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기반을 구축하고, 또 주요 치안 현안에 대한 대책지시와 이행 여부 점검을 통해 지휘·감독기관으로서의 위원회 역할도 내실화·구체화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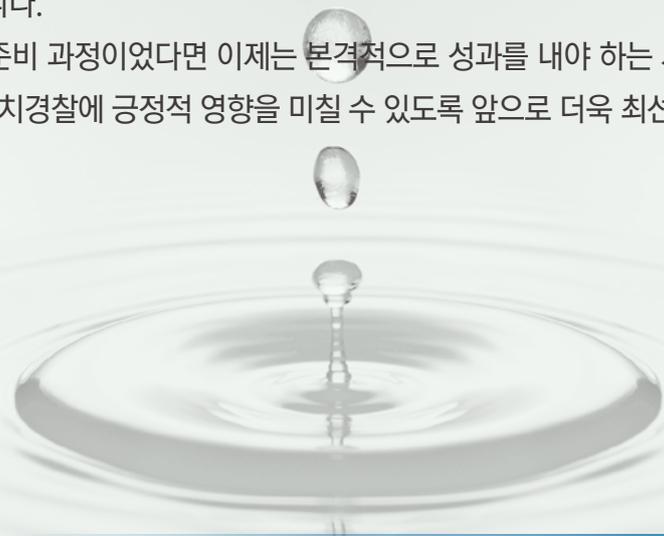
한편, 실무협의회 등을 활발히 운영하여 기관별 업무의 협의·조정 및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잦은 도로의 가변차로 폐지 문제를 검토하고, 불법 숙박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어비앤비를 비롯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전문가 자문단’과 ‘시민소통단’을 운영하고,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납품도매업자 차량 주·정차 시간 연장 고시를 개정하고,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협의체를 도입하였습니다. 나아가 아동학대예방 전담업무 보조인력을 지원하고,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도 차근차근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경찰 직장협의회와도 활발히 교류하며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정책에 반영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그간 다져진 기반을 바탕으로 부산시, 부산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경찰관 현장 대응력 강화 등 시민이 체감하고 지역 치안에 파급력이 높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지난 시간이 자치경찰제의 준비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높아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타 시도 자치경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환 위원장 약력

1953년생

경찰간부후보생(31기) / 부산청 보안과장 / 부산청 금정서장
/ 경남청 밀양서장 / 現 부산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